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 주간 북한경제 동향

##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1월 3일(월)  
통권1호(제1권 제14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로서 격주로 게재합니다.

## 분명하게 말하라

기업 운영에서 최악의 환경은 무엇일까? 바로 불확실성이다. 어떠한 판단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결정도 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싫어하고, 회피하려는 환경이다.

### 대북정책의 모호성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을 하는 기업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남북경협에 한해서만은 이명박 정부는 전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을 계속 해도 된다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는 1월 16일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날인 17일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참여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교류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평화경제론’에 입각해 있다. 이 기조 하에서는 당연히 남북경협은 대북정책의 골간이 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총괄하는 통일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수위는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어떤 메시지가 정확한 것인지 기업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 역시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하여 개성공단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3일 뒤 기자간담회에서는 “내가 개성공단을 가면 남북 관계에 제스처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추측을 할 것 같다”고 했을 뿐 아니라 3월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북핵 문제가 안 풀리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고 하여 남북관계 경색의 빌미를 제공했다.

기업으로서는 개성공단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이 태도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대통령부터 분명하게 말하라

이처럼 사업만 해온 기업이 현 정부가 남북경협에 보내는 메시지를 읽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4월 13일 방미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남북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였다.

물론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적 문제와 국제적 문제가 중첩돼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취급한다면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것이 두 시각을 기계적인 평균에 놓고 풀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각을 중심에 놓고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어느 쪽 시각을 중심에 놓고 푸는가에 따라 해법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국제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남북경협이 차지할 수 있는 역할과 의미는 제한적이다.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대북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족 내부의 문제를 중심에 놓는다면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는 좀 더 넓어진다.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모호한 메시지는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불확실성이다. 어느 때는 ‘우리가 남이가’(9월 10일, 민주평통 미주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 하면서 남북경협을 부추기는 듯하면서, 또 언제는 ‘개성공단 숙소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9월 10일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며 개성공단까지 부정하는 듯하니 기업으로서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당부하건데, 분명히 말해 달라.

남북경협, 계속해도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는가?

## ▶제14호 목 차

<b>이주의 칼럼</b>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	2
<b>이주의 주요 기사</b>	
올해 상반기 EU-북한간 교역 증가 .....	3
안개 속 해매는 MB 정부 대북정책 .....	4
“北라진항 물동수요 10년 뒤 3배 증가”<전문가> .....	5
‘빠라 경색’에 개성공단 ‘살얼음’ .....	6
정부, 북 ‘중대결단’ 경고에도 불구하고...개성공단 낙관적 전망 .....	7
정부, 대북식량지원 ‘갈팡질팡’ .....	8
정부, 개성공단내 탁아소 설치 추진...기숙사는 불투명 .....	9
남북 합영회사, 평양시내 첫 진출 - 평양대마방직 .....	10
US seeks energy assistance for N. Korea .....	11
齋木局長、日朝關係打開への協力を米に要請 .....	11
추천논문 /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 평가와 전망 .....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2

###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제40차통일전략포럼  
▶주제 :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일시 : 2008년 11월 6일(목) 15:00  
▶장소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 정산홀
- 남북물류포럼 매거진 ‘INFLO’ 창간 이벤트  
▶특강:한반도 물류비전과 남북물류포럼 매거진의 역할  
▶일시 : 2008년 11월 6일(목) 18:30  
▶장소 : 조선히텔 오키드룸(2층)
- 제12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제 : 탈북자 그 7년간의 삶들  
▶일시 : 2008년 11월 7일(금) 14:00  
▶장소 : 한반도평화연구원
- 제37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주제 : 팍팍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시 : 2008년 11월 10(월) 19:00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 이 주의 칼럼

##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남북 사이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개성공단마저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듯하다. 최근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협외와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두 차례나 개성공단 중단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대목은 북한은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이익 추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계산만을 고려해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포기할 것이라는 진단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6.15와 실천 강령인 10.4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추진될 수 있었던 남북경협프로젝트이고, 이 사업이 확대 발전되는 것이 민족공존공영,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인식하면서도 북한 체제유지,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적 실리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어, 이 비전 실현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가능하면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은 6.15, 10.4 남북정상선언의 상징

이자 성과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발전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북한내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강경 세력들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명분을 계속 제공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의 앞날은 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장 남북관계 경색이 깊어지고 심화되면서 근로자 공급 지연, 바이어들의 주문취소, 출입 제한 등으로 일부 입주기업들의 도산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남북 당국간의 접촉과 대화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점이다.

지금은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와 실질적 신뢰 구축이 개성공단 발전의 관건이다. 북한 근로자의 적기 공급이나 이와 관련된 숙소 건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은 남북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북한은 신뢰할만한 채널을 통해서 남측 정부의 진정한 의지와 의도를 재확인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관계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이 글의 전문은 <http://www.kolof.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북한에 대사관 개설 추진

-- 10월 28일 헤럴드경제

브라질 정부가 평양에 대사관 개설을 추진중이라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7일 보도했다.

브라질은 세계 모든 국가에 대사관 및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대외정책 방침에 따라 최근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에 잇따라 대사관을 설치한 바 있다.

브라질 외무부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는 않은 채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추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합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과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수교 이후 2004년 9월부터 상주 대사관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브라질 정부가 대사 파견을 위한 아그레망을 승인한 뒤인 2005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박혁을 브라질 대사로 임명하고 대사관을 공식 개설했다.

브라질리아 주재 박혁 북한대사는 2005년 11월 말 룰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북한이 정치 분야에서는 냉전체제 이후 계속돼온 폐쇄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또는 베트남과 같은 개방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전문가, “북, 올해 식량 부족분 50-80만톤” 주장

-- 10월 28일 노컷뉴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소 50만 톤에서 최대 80만 톤 정도 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추정했다.

북한 경제와 식량문제 전문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스티븐 해저드 교수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올해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올해 166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의 절반 수준인 최소 50만 톤에서 최대 80만 톤 정도일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북한 농업성이 올해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약 3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전했으며, 최근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북한의 올해 식량 수요량 540만 톤 가운데 9월 현재 441만 톤이 확보돼 99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EU-북한간 교역 증가

-- 10월 28일 노컷뉴스

북핵 진전의 영향 등으로 올 상반기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08년 상반기 유럽연합의 무역 현황을 인용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총액은 미화로 약 8천8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천만 달러보다 2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난해 대북 경제 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급감했던 대북 교역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주로 수출한 품목은 운송도구와 기계류, 그리고 잡화와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광물자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2007년 말 기준으로 네덜란드이며, 이어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순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리근, 美 대선 직후 뉴욕 방문

-- 10월 28일 연합뉴스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 대선 직후인 내달 초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리 국장은 전미외교정책 협의회(NCAFP)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등의 초청을 받아 뉴욕을 방문,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자는 잡혀있지 않으나, 빠르면 5일 늦어도 7일께 리 국장 일행이 뉴욕에 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리 국장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비슷한 목적으로 뉴욕을 방문, 미국 정부 관리들과 비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은 미 대선 직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 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 대선 당선인측 인사들과 접촉, 향후 북미관계의 방향과 관련해 차기 미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홍준표 “대북정책 노하우 존중... 야당 협조”

-- 10월 28일 뉴시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대북정책 노하우를 존중하겠다’며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이 쌓아온 대북정책의 노하우를 존중하며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남북관계특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자”며 “여기에 남북 정치회담을 포함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제

안했다. 그는 또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대북협력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은 어렵게 마련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의회 대표단 “北 검증협력하면 원조 제공”

-- 10월 28일 연합뉴스

한국을 방문중인 후베르트 피르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북한이 검증활동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EU)에서는 북한에 더 많은 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르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가 빨리 재개되는 것”이라며 “EU는 중립적 파트너로서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씩 평양과 서울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역할을 모색해 왔다.

#### 안개 속 해매는 MB 정부 대북정책

-- 10월 28일 뉴시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통일부와 외교부, 외통위 정책자문위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급 이상) 등 142명에게 지난 15~20일 e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38명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수로 환산하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대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북정책 로드맵의 적정성(비핵·개방·3000 정책)(15명) ▲대통령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16명) ▲남북대화에 대한 접근방식 및 전략(19명)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방식 및 전략(15명) ▲기 체결된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인식(20명) ▲통일부의 역할 수행 능력(남북관계)(20명)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15명) 등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같은 질문에 ‘다소 악화됐다’고 응답한 항목은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16명) ▲대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 및 동의(22명) ▲대국민 통

일 교육 정책(14명)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전략(14명) ▲6자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16명) ▲외교부의 역할 수행 능력(북핵 및 6자회담)(13명) ▲북한 및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15명) 등이다. 아쉽게도 ‘크게 개선됐다’ 또는 ‘다소 개선됐다’고 답한 것은 모든 항목이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 정부,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제 폐지

-- 10월 28일 연합뉴스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법상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제도를 간소화해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어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키로 했으며, 남북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해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 특례법 ▲1천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주가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한다.

#### 통일부 “남북합의 감안, 뼈라살포 자제돼야”

-- 10월 28일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북한이 거듭 문제삼고 있는 민간 단체의 대북 뼈라 살포에 대해 “남북간 여러 합의를 감안할때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뼈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말하고 27일 오후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를 갖고 이런 기본 인식에 뜻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2004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서에는 그해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北라진항 물동수요 10년 뒤 3배 증가”<전문가>

-- 10월 28일 연합뉴스

북한 라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가 2020년에는 올해의 3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봉민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 장미홀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라진항과 중국의 동북3성간 연계도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정비되면 라진항의 컨테이너 화물 수요는 올해 1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10년 128만, 2015년 205만, 2020년 325만TEU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라선(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국제 화물중계, 수출가공, 관광금융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라진항은 중국 동북3성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동북3성은 동해나 태평양으로 출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라진항이 “동북3성 화물의 관문”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라진과 동북3성을 잇는 도로망 정비, 라진-하산(러시아)간 철도정비, 한·중·러 합작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군부 “빠라살포 등에 軍 실천행동” 경고

-- 10월 28일 연합뉴스

북한 군부는 28일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등이 계속될 경우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밝힌 대로 북한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또 6.15공동선언 등 “역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그에 따른 모든 북남 합의들”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행동”을 남한 정부에 요구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대한다면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한 우리의 중대결단이 실행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특히 최근 실시된 합동 화력시범훈련 등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준비”라고 주장하며, 남한의 선제타격에는 “보다 강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에 의거한 상상밖의 선제타격”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니세프, 내년 10월 北아동 영양실태 조사

-- 10월 28일 연합뉴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7개도와 1개 자치도시의 4천800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고팔란 발라고팔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가 말했다.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1998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7세 미만 어린이와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여성의 영양상태를 조사하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 때문에 200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내년 조사가 이뤄지면 5년만에 재개되는 영양실태 조사는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15년만에 이뤄진 인구주택총조사, 유엔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주도로 4년만에 재개된 수확량 조사에 이어 3번째 재개되는 대규모 북한 현지 실태조사다.

北작황 조사결과 “좋다.나쁘다” 전언 엇갈려

-- 10월 29일 연합뉴스

북한의 올해 작황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 실사 결과 “올해 수확량이 꽤 좋은 편”인 것으로 들었다고 로마 주재 한 아시아 대사관의 외교관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올해 가을 수확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될 것 같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WFP와 FAO가 북한의 올해 작황에 대한 최근의 예비 조사결과를 식량 지원국에 제공했다며, 북한의 식량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슬리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각 지역의 식량생산 수준과 올해 식량 부족분을 정확히 파악했다면서, “올해 수확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될 것 같다”며 “한마디로 북한의 식량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인 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조기경보국장도 이번 달 북한의 추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연료와 비료의 태부족이 수확량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美, 대북중유 제공 일본 대체 국가 찾는다

-- 10월 29일 뉴시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제공키로 약속한 중유의 일본 몫을 메우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호주가 북한에 연료를 제공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힐 차관보는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회담 뒤 호주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6자회담 관련국 이외의 국가들이 연료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같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제외한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북한의 핵 불능화와 검증의 대가로 100만톤의 중유나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일본은 "북한이 먼저 납치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빠라 경색’에 개성공단 ‘살얼음’

-- 10월 29일 연합뉴스

“개성공단 출입은 물론 공단 내에서도 행동거지나 말조심을 하느라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대북단체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 등 신변문제도 담은 ‘빠라(전단)’를 북한에 풍선으로 띄워보내는 데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 공단에 입주한 A기업 관계자는 28일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순 전단지 문제가 본격 불거진 뒤 북측이 개성공단 출입자의 소지품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몇몇은 김 위원장관련 내용이 보도된 인쇄물로 물건을 싸 갖고 들어가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벌금을 물리고 말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까지 북측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에 상주하는 기업 관리자 등은 기한도 없이 출입거부를 당하면 ‘추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애로를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지난 25일 대북 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청하는 호소문에서 “올해 좋지 않았던 남북관계가 전단 살포로 더욱 경색돼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고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으며, 바이어 및 기업 투자자의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되고 남측 주재원들이 추방되는 등 개성공단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가동

-- 10월 29일 연합뉴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29일 18대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용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힘쓰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대북식량지원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3개 교섭단체 간사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박선숙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정일 잠행 지속...건강상태 해석 분분

-- 10월 29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잠행이 계속됨에 따라 그의 건강 이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9.9절 기념 열병식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한달만인 이달 초 김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사실을 보도하고 군부대 시찰 사진 10여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이 최근 찍은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에도 김 위원장이 대외활동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건강 이상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빠라)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나와 견제를 과시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 저명한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우리 정보 당국이 김정남의 프랑스 방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됐다.

그러나 우리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 건강상태가 후유증이나 외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공개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비는 넘기고 회복단계에 있다는 판단이다.

北·中, 압록강·두만강 수리협력회의록 조인

-- 10월 30일 연합뉴스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과 중국 수리부 대표단 사이에 압록강·두만강의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록이 2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인식에선 북한측에서 고일훈 기상수문국장이, 중국측에서 방북중인 류녕 수리부 총정공사가 서명했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 기상관측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상과 재해예보를 위한 대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대북 중유지원 논의중”

-- 10월 30일 연합뉴스

뉴질랜드 정부가 대북 중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핵 6자회담 참여국들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과 뉴질랜드 정부가 중유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논의단계’에 있다고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 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2.13 합의와 10.3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 분담료 20만톤의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의 대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질랜드 대사관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단독으로 참여하지, 아니면 현재 지원을 검토중인 호주와 공동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임스 편넬 뉴질랜드 외교장관 수석 비서는 “뉴질랜드가 내달 8일 총선을 앞둔 만큼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문제는 새로 들어설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정부, 북 ‘중대결단’ 경고에도 불구하고...개성공단 낙관적 전망

-- 10월 30일 폴리뉴스

북한의 거듭되는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하중 통일부장은 29일 정부종합청사인근 한 식당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금년중에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28일에는 조선신보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부 대변인 대답’을 담은 기사에서 거듭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북업무 책임자의 발언이란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즉, 김 장관은, 북한이 경고한대로 실천할 경우에 개성공단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히려 근시일내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한 당국자의 견해를 참고하면, 정부는 북측이 거듭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에는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면도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北, 주식회사와 장기독점사업권 도입해야”<전문가>

-- 10월 30일 연합뉴스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면 주식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교수가 30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형태만 고집해서는 다양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개혁을 이룬 중국 및 베트남과 북한을 비교, “문화 개방 20년이 경과한 북한의 현실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초기의 수준”이라며 “경제특구의 성공과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형태와 관련, 그는 “베트남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등 다양한 종류를 보장”하지만 북한은 “합작기업과 합영기업, 외국인 단독기업만 허용하고 기업의 자율성도 극히 제한해 외국인 투자의 장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북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들 “북한 식량 위기 아니라는 통일부에 실망”

-- 10월 30일 크리스천투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를 향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촉구해 온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최근 “북한 식량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다”는 통일부 발표에 대해 “안일한 대처에 극도로 실망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지난 24일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금년 북한의 작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식량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수가 시작됐고, 금년도 기상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매년 오는 호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통일부 발표에 대해 종교인 모임은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마저리 WFP 소장파 발라고팔 유엔아동기금 북한사무소 대표, 오 데아 식량농업기구(FAO) 북한사무소 대표, 푸리 세계보건기구 북한사무소 대표, 유유 유엔인구기금 북한사무소 대표 등이 지난 23일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북한의 실상을 전하면서 “지금 북한에는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말의 최악의 식량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유엔 산하 북한 현장책임자들은 24일 통일부를 방문해 식량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北-EU, 교역·정치교류 활발

-- 10월 31일 연합뉴스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에 교역이 증가세로 반전하고 정치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북핵 6자회

담이 진전을 보면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새 ‘시장’에 대한 EU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해제도 이뤄짐으로써 북한 문을 두드리는 EU의 발걸음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은 31일 “2001년 5월초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단장으로 한 EU특별사절단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한 뒤 EU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면서 “이어진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EU기업의 대북 진출이 가속됐다”고 말했다.

코트라(KOTRA)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과 EU 간 교역액은 2001년 3억1천352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3억3천851만달러로 늘었다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EU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06년에는 2억3천462만달러, 지난해는 1억3천973만달러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 8천8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7천만달러에 비해 26% 늘어나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EU의 무역 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달 22~25일 평양에서 110여개 외국기업 및 참관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23개 EU기업이 참여해 지난해 가을철전람회 8개, 올해 봄철전람회 17개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 대북식량지원 ‘갈팡질팡’

-- 10월 31일 아시아경제

북한 식량 사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추수기인데다가 올해 작황이 좋다고 해 긴급 식량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북한의 식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는 북한 식량이 부족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인지 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일섭 북한 농업성 대외협력국장은 29일 “올해 수확이 468만톤에 달해 지난해보다 17%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대규모 흉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황이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북한의 식량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 우리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간의 북한 활동을 마치고 최근 통일부를 방문한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 몇몇 지역에서는 식량난이 긴급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고 평가된다”며 “대

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하루 두끼 식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단체 JTS, 北에 밀가루 500t 지원

-- 10월 31일 연합뉴스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 스님)는 북한의 강원도 주민에게 긴급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오전 인천항을 통해 밀가루 500t(4억원 상당)을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낸다. 2만5천 포대에 나뉘어 담긴 밀가루는 이튿날 남포항에 도착해 강원도 원산시의 육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어린이와 양로원 노인들에게 100t, 법동군과 고산군, 통천군, 세포군 주민들에게 각 100t이 전달될 예정이다.

JTS는 이미 국내에서 2차례 밀가루 700t을, 중국을 통해 495t의 국수를 북한에 보내 량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에 사는 어린이와 노인 등에게 긴급 지원했다.

정부, ‘검증의정서-철강재 제공’ 연계 검토

-- 10월 31일 연합뉴스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핵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정식 채택된 이후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철강재 3천t을 배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6자회담에서 정식으로 채택할 검증의정서에 지난 1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미간 핵검증 합의’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담겨야 의정서에 ‘동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6자회담에서 채택할 검증의정서에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모두 담긴다면 정부는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다르다면 우리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 국무부가 발표한 것에는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한 합의’도 담겨있다”면서 “북한이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수용하는 지 여부를 6자회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대선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당한 상황변화가 예상된다.

WSJ “글로벌 금융위기 북한에도 영향 미쳐”

-- 10월 31일 국민일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서울발 기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북한에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의 연간교역액이 20억달러에 불과한 폐쇄적인 국가지만 주력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 업체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아연 등 북한 광물의 수입가격을 낮췄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일부 광산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국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중국 업체들이 북한 원자재 구입에 예전에 지불한 것 만큼의 돈을 내길 원치 않고 있다”는 경남내 임을출 교수의 발언을 전한 뒤 “북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물, 고철 등의 밀거래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대외 교역이 거의 없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회오리를 피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통신은 한국의 구호요원들을 안내하는 북한 안내원의 “세계 각국이 위기에서 회복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들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정부, 개성공단내 탁아소 설치 추진...기숙사는 불투명  
-- 10월 31일 뉴시스

정부가 개성공단 내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소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8억~9억여원을 들여 개성공단 내에 탁아소를 설치키로 하고 11월에 개최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3일 개성공단에 통근 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 총 170여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내 기숙사 문제는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복핵 불능화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등의 진전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유엔특별보고관 “무조건적인 北 지원 지지”  
-- 10월 31일 국민일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비탄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박6일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북측의 반대로 방북하지는 못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무조건적인 인도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모니터링 없이 식량 지원 없다(no access, no food)”고 말했다. 식량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의 인권 상황 개선이 없어도 식량을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취약 계층에게 식량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

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례인권보고가 2009년 유엔 인권보장이사회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유엔의 인권 조사에 대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했다.

“美 새대통령에 키신저·페리 파복안 건의”< RFA >  
-- 11월 1일 연합뉴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수개월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윌리엄 전 장관을 북한정책조정관으로 임명, 윌리엄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뒤 그해 10월 제출한 복핵 해법에 관한 ‘페리 보고서’를 대북정책의 지침으로 활용했던 전례와 유사한 것이다.

비영리 외교전문 두뇌집단인 NCAFP는 오는 7일 뉴욕에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도 참석하는 비공개 복핵 토론회를 가진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초당적 대표단의 파견안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NCAFP의 도널드 자고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만 말했으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최측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수개월내 키신저, 페리 전 장관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대표단은 방북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北·美 과학자교류 본격 추진...美대표단 1월 방북  
-- 11월 1일 연합뉴스

미국의 정보기술(IT)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대표단이 북·미 양국 정부의 후원아래 이르면 내년 1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진흥협회와 시라큐스대, 민간연구개발재단, 코리아소사이터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미국과 북한간 과학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이 이번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 과학자들은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 과학 기술의 현황에 대해 북한 과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간 교류를 늘리는 방안에 관해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北 프로그램 전시회 질·양 수준 향상”<조선신보>

-- 11월 3일 연합뉴스

북한 평양에서 지난달 23~30일 열린 ‘제1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규모나 기술면에서 작년에 비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일 보도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관련 연구 발표장인 이번 경연 및 전시회에는 40여개의 성(省), 중앙기관과 120여개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서 600여건의 프로그램을 출품,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제18차 전시회에는 500여건이 출품됐다.

북한의 윤창화(56)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국 부국장은 “전시된 프로그램들은 현실에 도입돼 실지 은(성과)을 내고있는 것들”이라며 “특히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업무 정보화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한계단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북한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 11월 3일 한겨레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도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2일 전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협의 이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북쪽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된 대응’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 회의체이며, 통상 매주 목요일에 의장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달 18일 회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10월11일)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재개(10월12일) △북쪽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 경고글 게재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실제 이 회의 이후 정부 대북정책의 보수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북한의 불능화 재개 직후, 정부가 6자 회담 진전을 ‘환영’

하는 논평을 내고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던 태도가 다시 바뀐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18일 회의 이후엔 ‘대북사업 재조정’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또 북쪽이 지난달 27일 군사실무자 접촉에서 가동중단 상태인 서해지구 군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껏 지원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6자 회담 차원에선 북쪽의 불능화에 맞춰 한국이 북쪽에 지원하기로 한 철강재 3천t의 제공 일정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 합영회사, 평양 시내 첫 진출 - 평양대마방직

-- 11월 3일 한국일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역사에서 의미 깊은 행사가 열렸다. 남측의 안동대마방직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새별총회사가 합작 운영하는 평양대마방직 준공식이 거행된 것. 평양 시내에 들어서는 첫 남북 합영회사다.

두 회사는 절반씩 총 3,000만 달러를 들여 평양 선교구역 영제동 4만5,000㎡ 부지에 공장을 완공했다. 이 부지는 예전에는 인민군 공병대가 있었던 곳이다. 인근에는 평양 최대 규모의 방직공장도 자리하고 있다. 북측 관계자는 “이렇게 좋은 터를 내준 것은 그 만큼 남북 합영회사 성공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격려사를 보내 안동대마 김정태 회장이 대독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준공식은 분단 60년사에서 남북 경제인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민족의 쾌거이고 개성공단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라며 “남과 북이 손을 맞잡으면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평양대마방직은 평북 성천군 600만평 농장에서 재배한 대마를 가공한 뒤 전량 중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양말 타월 실크 등의 섬유제품은 남쪽에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500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3,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공장에는 천주교 작은형제회가 북측 노동자에게 식사와 진료 등을 제공하는 평화봉사소도 문을 열었다.

North Korea in the Slow Lane

저속레인 속의 북한

-- 10월 31일 Asia Sentinel

출처: [http://asiasentinel.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513&Itemid=179](http://asiasentinel.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513&Itemid=179)

Cult Myung Moon helps Kim Jong-Il build Fiat knockoffs for which there are no drivers

Since 2004, Pyongyang has started to boast billboards — not pictures of the smiling Dear Leader or Great Leader exhorting increases in production, but actual advertisements for actual products — an actual single product, rather.

Scattered around the city of almost 3 million people, the billboards all promote the same company: Pyeonghwa (Peace) Motors, North Korea's only passenger car manufacturer. A joint venture started in 2002 between the Reverend Sun Myung Moon's Unification Church and North Korea's Ryongbong Corporation, the factory produces a tiny amount of cars for a tiny domestic market.

Does it make economic sense to build or invest in a car factory for a country with 23 million people but fewer than 30,000 vehicles, a city where cars are so scarce that in the warmer months, traffic ladies swinging their stop signs act in place of electric lights, where hardly anybody knows how to drive? And why is Sun Mymung Moon, owner of an international business empire and a virulent investor in North Korea? ……

2004년 이래 평양의 광고판에서는 지도자의 훈시가 아닌 상품광고가 나타남. 이는 통일교와 북한 용봉총회사의 JV로 2002년 설립된 평화자동차의 광고임. 매우 협소한 시장에 극소수 만이 운전할 수 있는 북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5500만 USD가 투자되어 평양 남서쪽 남포시에 설립된 이 회사는 연간 2만대의 생산 능력이 있으나 지난 5년간 2000대 만이 생산되었음 …

US seeks energy assistance for N. Korea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국을 찾고 있다

-- 11월 1일 AP

출처: <http://ap.google.com/article/ALeqM5iURO8fOyWVOA0ytFlAGuC9F7R9wD945TDF85>

The United States has asked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European Union whether they could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under an aid-for-disarmament deal, a South Korean official said Saturday.

Under last year's landmark six-nation pact, North Korea was promised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energy aid from the U.S.,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in return for dismantling its nuclear facilities. Japan, however, has refused to donate its part of energy shipment amid a dispute over Pyongyang's abduction of its citizens in the past.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said in an interview published Saturday in the Korea Times that the U.S. tapped the opinions of the three parties about taking part in the energy aid instead of Japan. ……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EU 등에 일본이 자국민 납치문제로 인해 지원을 거부한 6자 회담 이행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대신 분담할 수 있는 지를 타진하였다고 한국의 유명환 외통부 장관이 밝혔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일본이 입장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함. 유 장관은 이번 달에 열리는 아셈 회의 이전에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전망하였음.

齋木局長、日朝関係打開への協力を米に要請

사이키 국장, 미국에게 일·북 관계 타개를 위한 협력 요청

-- 10월 29일 마이니치신문

출처: <http://mainichi.jp/select/world/asia/archive/news/2008/10/29/20081029dde007030015000c.html>

北朝鮮の核問題を巡る6カ国協議の日本の首席代表、齋木昭隆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長は28日、ワシントンで米首席代表のヒル国務次官補と会談。齋木局長は記者団に「日朝関係の前進が図れるよう改めて協力を要請した」と語った。

齋木局長は、8月の日朝協議で合意した拉致問題を再調査する調査委員会が設置されていないことに言及。「北朝鮮からの前向きな対応と、米国のサポートを期待している」とヒル氏に求めた。国家安全保障会議(NSC)や議会関係者にも同様の要請をしたという。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라 총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28일 워싱턴에서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하며, “일·북 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차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뜻을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나 의회 관계자에게도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호주 등으로 대신하려는 것이 납치 문제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못을 박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朝鮮・拉致問題：拉致実行機関と交渉ルート開拓 - 漆間官房副長官

납치 실행 기관과의 직접적인 교섭 루트 개척할 예정

-- 10월 30일 마이니치신문

출처: <http://mainichi.jp/select/seiji/archive/news/2008/10/30/20081030ddm005040112000c.html>

政府の拉致問題対策本部関係省庁対策会議が29日、首相官邸で開かれ、16府省庁の担当者が出席した。麻生政権発足後初の開催。対策本部事務局長の漆間官房副長官は「北朝鮮の党、軍に直結した特殊機関に日本政府のメッセージを伝えるルートがないと、相手を本当に動かす対話はできない」と述べ、拉致を実行した機関との交渉ルート開拓に力を注ぐ考えを示した。

일본 정부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 관계 부처 대책 회의’에서 대책 본부 사무국장 우루마 겐 관방 부장관은 ‘북한의 당, 군과 직결된 특수 기관에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루트가 없으면 상대와 실질적 효력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납치를 실행한 기관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루트 개척에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천 논문

# 김정일 시대의 경제 정책 : 평가와 전망

최수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2000년대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앞세워 왔다. 하지만 저성장이란 이 기간의 거시경제지표는 북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반영한다. ‘선군노선’으로 중공업, 특히 군수산업에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된 결과이며, 결국 북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선군노선’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북한이 강조했던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선, 현대화 및 정보화는 외부의 투자와 기술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기술로 보수,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것이 북한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심스럽다.

2002년부터 공식화된 7·1조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은 시장의 활성화 및 특히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성 향상 등 북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초고속인플레이션 진행, 계획 부문의 잠식에 따른 북한 당국의 불안감 고조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며 북한에서는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 대상인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결국 경제난과 대북봉쇄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탄생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안은 처음부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 정책의 방향은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어 바뀌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대외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북미관계의 진전은 ‘선군’을 내세우며 경제건설을 주장해온 북한 경제정책의 수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체제 위협의 완화는 ‘선군’의 역할과 의미를 퇴색하게 할 것이며, 국방공업 중심의 자원 배분의 왜곡구조도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외환경의 긍정적 변화는 부분적일지라도 외부의 자금과 기술의 유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북한 산업의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경우 현대화는 우선적으로 경공업부문의 수출산업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체제 문제와 연결된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은 대외환경이 변하더라도 급격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도입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후퇴는 하지 않겠지만 체제 위협에 대한 분명한 보완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로운 조치는 가능한 한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조치는 7·1조치로 나타난 계획부문의 위축과 같은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므로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에너지, 원자재 등의 선행부문의 정상화와 경제의 현대화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추진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기존 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효과를 최대화하려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4.jsp](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4.jsp)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 북한, ‘우리정부에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

○ 10.31 노동신문은 “우리(北)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거부하며 북남대결을 조장 격화시키는 남조선정부의 반민족적 책동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남조선은 오만 무례하게도 그 무슨 ‘협박’이니, ‘유감’이니 하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입장을 헐뜯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미화 분석하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면서 “북남관계를 폭발 직전의 침예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신문은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바로 그 길에 있다”고 촉구했다.